

## 스웨덴의 우익실험과 사회민주당의 2010 선거전략

스웨덴에서 라인펠트 우익정권이 들어선지 1년 하고 3개월이 지났다. 4개 우익정당들이 사회경제개혁을 주도한 한해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 변화의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와 더불어 야당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는 사민당은 1년 전 선거의 패배에서 재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010년 재집권 가능성은 있는지 진단해보면서 스웨덴 사민주의가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2006년 스웨덴 총선은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논란을 양산해 냈다. 1994년 이후 12년 동안 지배해 왔던 사민당이 패배하고 우익보수 연립정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실패한 복지모델의 몰락이라고 단정짓기도 하고, 우익보수정권이 경제사회모델에 약간의 활력만 불어넣을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도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 우익정당들의 사회경제모델의 개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2006년 선거결과에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선거의 주된 관심은 1994년 이래 집권해 왔던 사민당이 4개 중도보수 정당들이 결성한 스웨덴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Sweden)의 도전을 받아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선거였다. 결과적으로 사민당은 1920년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인 35.2 퍼센트로 나머지 중도좌익 정당인 좌익당 5.8 퍼센트, 그리고 환경당 5.2 퍼센트를 합쳐 46.2 퍼센트를 얻어 4개정당 연합의 48.1 퍼센트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2006년 선거는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가 단 1.9 퍼센트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였다.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310석의 고정석수와 39석의 추가석으로 구분되는데 4 퍼센트의 최저득표율의 넘지 못한 군소정당들은 일차배분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에게 이 39석이 득표율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어 결과적으로 4개 보수우익연합은 51 퍼센트로 의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박빙선거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 각 당의 선거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민당과 좌익당, 그리고 환경당으로 구성되는 좌익계열 정당들은 공공섹터의 확장과 사회약자 특히 연금생활자의 삶의 질의 확대와 소외계급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성 보조금의 확대를 주장하며 전통적인 선거공약에 집중했다. 반면, 우익정당들은 스웨덴 정당사에서 최초로 4개 정당이 함께 내놓은 선거공약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소외감과 생활의 질적 하락을 바로잡고 고용증대를 통해 복지제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또한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의료서비스 대기기간 등을 단축하기 위해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는 정책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육비 지급,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주세 대폭완화, 1년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시 고용주세의 한시적 폐지, 불합리한 주택세의 폐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실업급여를 인하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득세인하 정책을 선보였다.

또한 좌익계열에서 내놓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확대와 소외계급을 보호하는 공약에 대처하기 위해 사민당 하에서 이룩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책으로 유권자를 유혹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치과예방조치 비용 지원 등 최근 들어 높은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이

치과방문을 기피해 치아의 건강이 계급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정권교체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를 집중공략해 나갔다.

그러나 승부처는 다른아닌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에 있었다. 선거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당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질문에서 56 퍼센트의 유권자가 고용문제라고 답함으로써 선거에서 고용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한 라인펠트의 보수당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분야로서 학교교육, 의료분야, 경제성장 등의 순으로 학교교육 정책분야 역시 우익의 한 축인 국민당이 가장 중요시 했던 사안이었고, 의료부분의 개선 역시 우익연합이 개인의 선택권과 효율성의 증대를 앞세워왔던 사안이었던 만큼 큰 수혜자는 우익연합정권이었던 셈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민당의 실패원인으로 건설한 거시적 경제지표에 편승한 단일한 선거전략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민당의 페손총리는 스웨덴 경제가 다른 유럽국가와 OECD 국가들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 높은 노동생산성을 들으며 스웨덴 경제는 건설했고, 최근 2 년 동안 실업률이 5.6 퍼센트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라인펠트는 거시경제지표보다는 체감경제, 즉 병가결손일수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체념하고 국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선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고용주세가 높아 창업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격차보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간의 격차와 갈등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사민당을 공격한 것이 주요했다는 점이다. 결국 거시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체감경기가 안좋으면 집권당이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선 우익정권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1 년 동안 우익정권이 실험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거공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복지제도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봉급대체율을 낮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하 및 장기실업자 고용시 고용주세 국가보조라는 조치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는 점은 국민들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 년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만 15000 개를 넘어섰고, 사민당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연구소 (Konjunkturinstitutet)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실업률을 보면 사민당이 정권을 넘겨줄 당시 7.1%에 이르렀던 것이 1 년만에 1%가 줄은 6.1%를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사민당이 이미 경제성장의 기초하에 3 년동안 95,000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민당의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연구소가 새로 내놓은 우익정권 3 년동안 새로운 일자리수는 137,000 개로 이는 사민당 때보다 42,000 개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순전히 우익정권의 고용창출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익정권이 손을 댄 것이 주택정책이다. 지금까지 주택산정가(국세청이 산정한 가격)의 1 퍼센트를 매년 지불하던 주택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롭게 지방세로 4,700 크로네 (1 크로네=150 원)를 책정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사민당 하에서 새롭게 추진했던 주택산정가의 기준이 너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관이 아름다운 호수가에 있는 주택의 상대적 매력

때문에 세를 많이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는 하나, 주택의 창문이 에너지 절약형의 3중 창일 경우 환경세를 깎아주기는 커녕 주택이 고급이라는 이유로 주택세가 높게 책정된다거나, 새로 리모델링한 부엌 등의 고급마감재를 쓴 집일수록 산정가가 높아져서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호와 선택마저도 국가가 사회주의적으로 세금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익정권의 처방은 현 1%의 주택세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2006년 산정가의 0.75%나 혹은 4,700 크로네를 지방세로 돌려 납부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즉 높은 가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전의 주택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4,700 크로네를 내는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사람일수록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평균 집값이 200만 크로네(한화로 대략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일년의 주택세는 1%인 20,000 크로네를 지불해야 했으나 4,700 크로네로 대체되어 15,300 크로네만큼의 차익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도시의 경우 평균주택가인 500,000 크로네(7천 5백만원정도)의 경우 세제개혁 이전의 1% 주택세 5,000 크로네와 새로 책정된 4,700 크로네의 지방세와의 차이는 고작 300 크로네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부자일수록 주택세의 폐지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에서 상위층에 유익한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집 값이 낮을수록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가의 0.75%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줄어든 복지제도의 중요한 세원이었던 주택세의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20% 양도세득세를 30%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최고 160만 크로네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유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년 유예금의 0.5%를 국가에 납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경제적 정의에 부합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은 다른 듯 하다. 30%의 양도세득세는 주택가격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유예금의 0.5%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은행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한 연금생활자의 경우 20년전의 가격 200,000 크로네로 구입한 주택을 현재 주택시장가격인 1억에 처분했을 때 8천만의 30%는 너무 가혹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기다렸다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0.5%의 이자는 큰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어쨌든 2008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주택정책은 많은 우익정권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대량 이탈을 초래한 정책이 된 셈이다.

또 한가지 우익정권이 시행한 정책중에서 사민당을 포함한 좌익계열의 정당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받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 병가수당의 인하를 들 수 있다. 우익정권의 노동정책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업자에게는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낮춰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 하며, 장기 병가휴가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2007년 추계예산안에 포함된 이 같은 정책은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인하여 봉급생활자 평균 1000 크로네 씩 돌아가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18개월 동안 봉급의 75%를 지불하되 최초 6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 복귀시키며, 판정불가가 나면 계속해서 1년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재 복귀를 시도한다. 이는 1년동안 봉급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현행 병가수당을 75%로 낮추되 18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3년동안 34억크로네(대략 4800억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550,000명의 장기병가자를 조속히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익정권은 이 수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스웨덴 경제의 큰 부담이자 국가의 복지비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은 봉급대비 80%였던 병가수당을 75%로 삭감했다는 점이다. 즉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민들 중 특히, 청소년, 여성 등이 병가를 신청할 확율이 높는데,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봉급의 75%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익정권의 도덕불감증과 정권내의 불협화음을 들 수 있다. 우익정권 출발과 함께 장관 들의 시청료미납, 불법가정도우미, 검은 노동인력의 활용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국민 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스웨덴사회에서 지도자는 국민들과 달리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세금문제에서 깨끗해야 하고, 모든 사회적 규범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 내의 불협화음 또한 우익정권의 위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덴베리 국방장관이 정부의 군비삭감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품고 사임함으로써 라인펠트 수상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혔다.

결정적으로 우익정권의 도덕성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은 수상의 오른팔이었던 정책비서관이 숙직근무시간에 음주하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입을 맞추는 사진이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정책비서관이 사퇴까지 해야하는 정치적 스캔들로 국민들의 우익정권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정권초기부터 수상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 왔다. 현재 스웨덴이 안고 있는 과중한 세금부담과 효율성이 낮은 노동시장정책과 의료복지 체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우익정권의 수장인 펠트수상이 언론을 통해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경제 상황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실업율의 하락, 실질적 봉급수준의 향상 등 사민당 때보다 거시경제 및 체감경기가 훨씬 좋은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알리고 설득해야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우익정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가 우익정권을 난감하게 하고 만들고 있다. 현재 우익정권은 개인병원설립의 자유화, 주치의와 의료원 선택의 자유 등 의료개혁을 단행중이다. 내년에는 마르티나(Martina) 아동병원이 기업에 의해 스톡홀름에 설립된다. 현재 아동병원이 짧게는 3개월이상, 길게는 1년까지 수술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라 스톡홀름시에서 사립아동병원을 허가해 주었다.

또한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류판매회사 씨스템볼락(Systembolag)과 국영소유약국인 아포테켓(Apoteket)의 민영화, 국가가 최대주주인 텔리아소네라(Telia Sonera) 통신회사 등의 굵직굵직한 국영회사 들을 차례로 민간에게 넘기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정부가 너무 민영화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익정권과 3 개 좌익계열의 정당 즉, 사민당, 환경당, 좌익당 연합의 지지율의 차이는 이미 20%를 넘고 있다. 즉 선거가 지금 당장 있다면 사민당이 다시 정권에 복귀한다는 뜻이다. 그것도 사민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인 과반수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지지기반이 탄탄해졌다.

현재 사민당은 우익정권이 처한 상태를 은근히 즐기는 측면이 있다. 즉 복지제도의 축소 혹은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은 분명히 사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이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 2010 년의 선거전략은 분명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비장한 각오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6 년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폐손의 퇴각과 함께 새로운 당수를 선출했다. 2007 년 3 월 새로 선출된 모나살린은 베테랑 사민주의자로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모나 살린은 전국 290 개의 지구당을 돌면서 느슨했던 지도체제를 정비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선거의 패배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동한 선거분석팀의 보고서를 통해, 고용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점을 가장 곱씹고 있다. 지도부 차원의 안일한 대처와 전략부재도 중요한 패인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다.

사민당은 선거가 아직 3 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선거전략팀을 구성했다. 4 개 부분으로 나눠 복지정책팀, 고용정책팀, 환경정책팀, 그리고 외교정책팀으로 당내의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던 고용문제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익정권이 접근하는 것보다 더욱 친서민적인 복지제도는 필수적인 셈이다.

물론 사민당이 2010 집권과 성공적인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가 산재해 있다. 먼저 전통지지층인 서민과 노동자들을 끌어안으면서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복지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당내에서 치열한 노선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노동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뒤따르지 않거나,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실업자와 장기병가자가 양산되는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복지제도의 근간인 세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채무가 증대되는 등 8-90 년대에 경험한 위기에 새롭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모나살린 당수는 당내의 정책노선을 놓고 벌어질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능숙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단 모나살린 사민당 당수의 정책기조를 보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일간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1950 년대의 연대임금제와 같은 노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생산력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점으로보아 먼저 전통지지층인 노동자의 결속과 책임을 통해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내년으로

70 주년을 맞고 있는 살트셰바덴조약(Saltsjöbadsavtal)의 정신을 살려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노조인 LO와 경영자 총연맹인 스벤스카 내링스리벳(Svenska Näringslivet)은 제 2의 살트셰바덴 조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해이해진 노동자들의 시민의식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의 복지부담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단기병가로 인한 노동결손일수, 조기퇴직 등을 통한 노동력부족의 문제는 상당부분 노동자의 시민의식의 기여가 복지부담금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월드컵이 있었던 한달 기간동안 스웨덴 노동자의 병가일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은 후한 병가수당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스웨덴 경제의 지구화 편입과 EU 가입 이후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구시장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등의 경제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또 다른 과제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세가지 세입원, 즉 높은 임금세금과 주세, 유류세, 흡연세 등 각종 간접세, 그리고 고용주세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임금세금과 고용주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안정을 잃고 스웨덴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경제가 해외로 대탈출을 시도한다면 사민당도 함께 와해해 버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친기업적인 정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모나살린은 잘 인식하고 있다. 즉 좌와 우의 스펙트럼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다 사민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좌익계열 정당인 좌익당과 환경당의 도움없이 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소수 단독내각을 수립하고자 할 때 중도보수정당들의 연립대안은 사민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좌익당과 환경당이 좌익연립내각에 참여하고자 할 때 좌익계열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사민당의 힘 또한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새 사민당 지도부는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선거전략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모델(The Swedish Model)은 무엇보다도 평등적 사회가치를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최소로 줄이고, 합의를 통한 사회 제세력간 갈등의 예방적 조치를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산업평화를 통한 고용안정,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참여, 노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등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요한 사민당의 정책기조였으나, 2010년의 선거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 정치학 교수